

야 5당, 3·1절에 '내란 종식·尹 파면 촉구' 공동집회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공식 출범
추 “개혁신당·시민사회 함께해야”
선언문에 ‘반헌법행위특위’ 담겨
야권 후보 단일화·정책연대 주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오는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 후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3월 1일에 원탁회의 차원에서 집회를 갖자고 합의했다. 각 정당 대표의 발언도 있을 것”이라며 “집회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하겠지만, 대략 광화문 주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3·1절 집회가 열릴 경우 시민단체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범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야5당 대표들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평화, 안보가 무너졌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소수 세력과 싸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시민사회도 함께 하길 바라고, 개혁신당을 포함해 헌정질서 수호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야권은 단단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 대개혁이라는 비전으로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대표는 “더 넓게 손잡고 싸워야 한다”며 “과거 촛불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한 대가로 오늘의 위기를 맞이한 뼈아픈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했다. 한창민 대표는 “정치 혁명 없이는 헌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막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정치로 다양한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등 원탁회의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으겠다”며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을 반드시 완수하고 극우 내란세력이 다시는 집권을 꿈꾸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 극우내란 세력의 잔뿌리까지 찾아 죄를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치개혁, 사회개혁, 권력기관개혁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 개혁 과제들을 도출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이 내팽개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동 실천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에선 원탁회의에 대해 조기 대선 가능성 앞에 정권 교체를 위해 범야권이 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정책 연대나 후보 간 연대 등 대선에서 야권이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의 틀이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덕수 “尹 다른 선택 설득 못해... 계엄은 무관”

현재,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
정청래 “파면해 헌법수호 의지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으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현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솔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현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절하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현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현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이날 현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종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동훈 복귀에 “더 자숙해야”... “달걀 맞더라도 복귀”

26일 책 출간 맞춰 정치 행보 관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복귀를 시사한 가운데, 당내에선 계파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1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가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은 이날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오는 26일 정식 출간에 맞춰 출판 기념회와 북콘서트 등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설 연휴 기간에 보수·진보 진영 원로 인

사를 두루 만나며 정치 행보에 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개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그동안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식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거센 당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엔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을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이렇게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뻔하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친한계는 한 전 대표의 복귀를 기정사

실화하고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달걀 세례를 받는 다 할 지라도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한 대표가 느꼈던 회한들을 진솔하게 당원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내내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며 한 대표를 공격하던 당내 기득권 정치인들, 아니나 다를까 왜 나오나면서 필멸된다”며 “새로운 정치, 변화와 쇄신의 바람, 시대를 바꾸자는 열망이 불어닥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형배, 靑중심도시 조성위 지위 격하 법안 반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민 의원은 △2년 반 가까이 제 9기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 △광주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없었던 점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하지 의문이라며 법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내일 박용진 독대... 연일 ‘비명계’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박 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첫 만남이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박 전 의원과 오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13일 친문(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 ‘비명계’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박 전 의원과 오찬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총리와 24일 만찬이 예정돼 있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

박 전 의원과 임 전 실장의 경우 지난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정치권에서는 친명계와 ‘악연’이 있는 인사로 꼽히는 만큼 회동이 더욱 주목된다.

尹, 오늘 서울중앙지법 첫 형사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는 당연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출석하는 기회이지 않느냐”며 “출석해서 (직접) 의견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리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쿠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